

노대통령 “독도 정면대응” 특별담화

■ 바빠진 외교통상부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 취할 것”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 특별담화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태스크포스팀 구성

그는 또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를 위한 외교부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며,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담화발표를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EZ 도발 단호히 대응

반 장관은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지형조사처럼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이 재발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계는 강조하고 있으나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독도문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일본이 노대통령의 담화내용을 겸허히 성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역사인식 먼저

반 장관은 한일 역사문제를 양국이 공동연구하는 방안 대한 견해를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독도

문제는 역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만큼 일본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해 하루 빨리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야는 26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을 제의하라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지금 그런 문제를 논의할 시기냐며 맞섰다.

여·야 한일정상회담 공방

한나라 “빨리 만나서 담판 지어라” 우리당 “아직 논의할 시기 아니다”

제의하라는 것은 일본측에 유리한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국민이 단합해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에 초점을 흐리는 제안은 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 언급한데 대해 “반성없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담화에 나선 유명한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데 대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적, 보수적으로 보도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주문했다.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대통령 특별담화는 조용한 외교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종합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J 방북 조만간 실무접촉 세부협의”

이종석 통일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남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18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당국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했다”고 회담 성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앞으로 지속적 협의와 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자와 국군포로를 모실 수 있다면 북으로 가고 싶은 장기수를 (우리가)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과 관련, “조만간 실무접촉을 통해 방북 일정, 방북단 규모, 절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해서 김 전 대통령 방북을 지원하겠다”고 전한 뒤 경의선 철도를 이

용한 방북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도 비관도 못 한다. 아직 전망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 이후로 상당히 경제가 경색되면서 북한군부 입장이 강화됐다는 느낌”이라면서 “그런 입장이 철도,도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 기간에 “남북 2차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면서 “우리는 북측이 답을 해야 한다

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추가 지원키로 합의한 비료 20만톤에 대해 “5월 중순에 지원을 개시해 7월 중순까지 전달하겠다”면서 “나머지 10만톤 지원문제는 추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북측이 제안한 독도문제 남북공동 대처와 관련, “전략적으로 볼 때 따로따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했다”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DJ “방북 지나친 이슈화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5일 6월 방북 문제와 관련, “금번 방북은 나의 개인적인 방북인 만큼 방북문제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사저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외와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최경환 비서관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남북장관급 회담 및 방북결과를 보고 받고 “앞으로 있을 방북 관련 실무협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차권 일각에서 DJ 방북이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대통령 특사론’, ‘남북연방제 합의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방북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정부 핵심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김 전 대통령 개인 자격의 방북”이라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실무협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반짝 1위” 실으면 삼성 따라해라

NYT, 연구개발 노력 상세보도

“애플사의 아이팟이나 소니사의 워크맨과 같은 삼성 자체의 독창성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들처럼 ‘반짝 1위’에 머물 것이다” 뉴욕타임스(NYT)가 25일 지난 해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전 세계 가전업계 1위 자리에 오른 삼성전자가 ‘왕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향후 연구개발분야 투자계획을 소상히 보도했다.

NYT는 삼성이 지난해 음악용 다운로드할 수 있는 캠코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냉장고, 계기판처럼 생긴 휴대전화 등 깔끔한 디자인과 다기능 제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아 592억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 이중 79억달러의 이득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라이벌인 소니의 지난해 예상 수익의 13배에 달하는 것. 하지만 삼성전자 종역들은 세계 1위에 올랐음에 불구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독창성이 부족하기 때문 이다.

삼성 종역들은 지금은 삼성이 가전업계의 리더이

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의 라이벌이나 세계 1위 재탈환을 노리는 일본의 경쟁자들을 계속 앞서기 위해선 삼성이 애플의 아이팟이나, 소니의 워크맨과 같은 획기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에 40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투입한 것의 두 배에 해당한다. 연구인력도 6년전 1만3천900명으 로 향후 5년간 3만2천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라이벌사들이 삼성을 무서운 경쟁자로 평가하지만 아직은 ‘개척자’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 하면서도 경쟁사인 소니사 종역의 입을 빌려 삼성이 가진 잠재력으로 풍부한 자금흐름과 디자인을 꼽았다.

또 NYT는 삼성 종역들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도 평가했다. NYT는 삼성 이전회 회장이 양 대신 집에 집종토록 회사를 밀어붙이면서 대변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 회장이 종역들에게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꿔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S칼텍스 (GS Kaltek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the slogan '에너지 리더 - GS칼텍스' (Energy Leader - GS Kalteks). The ad includes text about energy solutions and the company's commitment to innovation.